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중소기업계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대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의 조정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하도급업체의 납품가격에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이 1차로 협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는 것.

공정위는 하반기에 하도급법과 시행령을 고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느 한쪽이 조정협의를 요청할 경우 상대방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당사자 간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 대표와 공익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 납품단가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담지 않거나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해당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방법을 담은 계약서나 공정거래협약을 채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깎아주고 현장조사 면제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일단 공정위가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우선 조정협의의 대상이 전 업종으로 넓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출국없이 5년으로

현재 3년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재입국 절차 없이 5년으로 늘리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안이 발표됐다.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3년까지 고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하는 제도를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 없이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업무 공백없이

장기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더라도 본국의 사정으로 다시 입국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노동부·법무부 간 전산연계를 통해 고용허가 신청 후 사업장 배치까지의 기간을 현행의 4분의 3 수준으로 단축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보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제약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거쳐 확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애로 잡는다

원자재가·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발표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음식업중앙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장과 긴급 오찬간담회를 개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장·단기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업종별 단체장들은 최근 매출과 수익성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영안정 대책과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조세 등 경영부담 완화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중기청장은 이에 대해 서민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면밀히 추진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기청은 최근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취약과 과잉경쟁으로 여건악화를 감내하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인식하에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감면 등 경영부담 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이뤄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애초 카드사들이 공시했던 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중소대상 국세청 세법강좌 인기

국세청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르쳐주는 과정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국세청(청장 한상률)은 세무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지난달부터 세법에 정통한 고참 사무관들로 교수진을 구성해 주로 세무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세무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교육원은 우선 지난달에는 공익법인 관련 세법지식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감안, 두 차례에 걸쳐 '공익법인 관리과정'을 시범운영했다.

국세청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식변동처리나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잘못하는 바람에 특별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큰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추진

가족친화경영 인증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가족친화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족친화경영 인증제란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기업을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현재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중기 정보화 지원사업 및 중기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중소기업청과 협의 중이다. 아울러 가족친화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컨설팅, 고용안정 프로그램 등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가족친화경영 인증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가족친화 기업 인증마크를 받아 상품 광고와 기업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 '꺾기' 여전...중소 자금난 가중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대출과 연계한 정기 적금, 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받는 등 금융권의 불공정

대출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감사반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지난해 경영안전자금을 지원받은 대구지역 777개 기업 가운데 종업원 50명 미만 영세기업 60곳을 임의로 선별해 일명 '꺾기' 등 금융권 불공정 대출거래 경향을 조사한 결과 33개(55%) 업체가 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경영안전자금은 자금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국가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긴급 수혈 대출 자금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불공정 대출 형태별로는 금융기관이 가입을 요구한 경우가 16건(49%), 대출업무 담당자가 대출과정에서 적금 등의 가입을 요구한 사례가 15건(45%), 대출기업이 추후 금융거래 편의를 고려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입한 형태가 2건(6%) 등이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이같은 피해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맡을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과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적금, 연금 등의 형태로 가입하게 돼 기업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계획관리지역 허용가능 업종 확대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에서는 연접합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에 고했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은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업종에는 원모피 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이후 자연녹지(건폐율 20%)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해 기존의 40% 범위 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60%인 농공단지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도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개발행위 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도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연 1% 수준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실시

국내 최초로 메자닌(Mezzanine) 방식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기업 및 기술우수기업에게 연 1%의 저리로 초기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메자닌 방식의 성장공유형(주식연계형) 자금지원사업을 도입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올해 총 200억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점차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창업 초기 기업, 신기술개발 사업화 기업 등 미래 성장가치가 크지만 민간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10억원이며 지원금리는 1%(만기 보장금리 4%)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올해는 전환사채(CB) 방식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 방식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용 웹보안 '관제서비스' 출시

웹보안 전문기업 닷큐어(대표 손칭, www.dotcure.co.kr)는 최근 해킹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위한 웹보안관제 시스템을 이스라엘 본사와 함께 구축하고 웹보안 전용 관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닷큐어가 국내 웹 보안 시장의 대중화를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관제서비스'는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서버 플러그인 방식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웹방화벽인 닷디펜더를 기반으로 한다.

5대 이하의 웹서버를 가진 중소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부담없는 가격의 SaaS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웹서버의 위치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웹 방화벽 운영 및 보안인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웹서버 보안 진단 및 웹서버 보안리포트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70% "신입사원 마음에 안든다"

국내 중소기업 10개사 가운데 7개사 가까이가 새로 채용한 신입사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빠르지만, '질은 개인주의' 성향이 주요 불만족 요인이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동안 신입사원을 채용한 국내 중소기업 408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30.1%의 기업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매우 만족한다'는 기업은 4.7%로 소수에 불과했다. 반면 ▲그저 그렇다(43.6%) ▲불만족한다(17.9%) ▲매우 불만족한다(3.7%) 등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채용된 신입사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기업 142개사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신입사원들의 업무능력 부문과 회사 생활 능력 부문으로 구분해 질문한 결과, 먼저 업무능력 부문에 있어 만족하는 이유로는 업무에 대한 빠른 이해도를 꼽은 기업이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공 전문지식 보유(16.2%) ▲참신한 아이디어(9.2%) ▲어학능력(7.7%) ▲유연한 사고력(6.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베트남 진출 기업 기술유출 피해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이 국내보다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중국 광둥성과 베트남 호치민시에 진출한 중소기업 65개사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27.7%가 '해외 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 비율 17.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출 관련자는 대개 현지채용 직원(66.7%)이거나 협력업체 관계자(22.2%)였다. 본사 파견 직원(5.6%)으로 인한 유출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문제는 기술 유출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유출 기업의 38.9%가 2회 이상 유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중기센터 디자인센터 운영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지역디자인센터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디자인관련 대학과 연구소, 전문 디자인업체와 연계한 경기지역디자인센터를 도내 7개 권역에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등 컨설팅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디자인컨설팅, 재학생현장실습, 교육 및 세미나, 디자인연구과제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또 연구과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http://db.gds.or.kr)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중소기업 5곳중 4곳 “日과 기술교류 필요”

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일본 기업과 기술인력 교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98개사에 '한일 간 기술인력 교류사업이 필요한지'를 설문 조사한 결과 77.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술 교류를 희망하는 업종은 ▲기계(42.9%) △자동차(19.0%) ▲전자통신(15.9%) 등이었다. 교류를 원하는 분야는 '제품 개발' (42.9%)이 가장 많았고 '설계기술' (19.0%), '기계·금속 가공' (17.5%)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일 기업 간 기술 교류의 주된 목적은 '선진 기술 습득' (7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교류를 희망한 업체들의 17.1%는 '일본 기술자를 국내로 초청하기'를 원했고, 26.3%는 '한국 기술자를 일본으로 파견하기'를 선호했다. 두 가지 모두 원한 기업은 56.6%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中企 '간접금융 의존도 높다'

기존 중소기업 금융이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의 발전과 관계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간접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관계금융은 라이프사이클에 맞지 않는 경직적 자금 지원으로 인해 중소기업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상업금융기관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직간접 금융 수단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성장에서 퇴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감시·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금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관계금융은 대출과 같이 표준화되지 않은 금융상품 거래 비중은 높이는 반면 주식 등 표준화된 금융상품 거래 비중을 낮춰 중소기업의 간접금융 의존도를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간접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금융은 성장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부 신설법안 발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지난 6월 14일 장관급의 중소기업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공정 경쟁환경 조성, 중소기업 기술

지원 등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문 대표는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다른 정부 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인력 양보다는 질로 승부

인적자원 개발에 관심은 있으나 인력과 자원부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부재로 인적자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단순 노무·기능직이 6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취약한 인력구조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양적·질적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업은 업종별·지역별 조합 또는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주체가 되어 업종별 중소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공동 인적자원개발, 공동필요 인력확보, 인사관리 시스템 선진화 등 중소기업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해 업종별 수요자 단체(기업)와 매칭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들 “연동제 수용을”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밝힌 '납품단가 협의 의무제' 도입에 대해 대체로 미진하다며 연동제 도입만이 원자재난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2일 납품단가가 국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대신 거래 당사자들이 1차로 협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납품단가 협의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계약 체결 때 조정 의무를 뒀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면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측은 또 단가 조정을 의무화했다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대기업이 형식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단가 협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원·수급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표현해 자칫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조정협의 의무제를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